

"촛불 과제 완수, 민중의 봄 앞당기자" '민중공동행동' 출범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8.05.10 15:26

민주노총 등 50여개 단체 “한반도 평화의 봄과 함께 '민중의 봄' 위해 함께 하자”



노동자, 농민, 빈민 등으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 민중의 봄, 우리가 앞당기자"며 대형현수막을 펼치는 상징의식을 보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2016년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 투쟁에 앞장섰던 노동, 농민, 빈민, 학생 청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인 10일 새로운 연대체 '민중공동행동'으로 출범했다.

'민중공동행동'은 10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완성되지 않은 촛불 민의를 끝까지 관철하고자 민중공동행동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촛불의 힘으로 어둡던 사회를 밝혀냈다. 촛불항쟁의 밑거름을 만들었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촛불항쟁 이후 미완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다시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민중공동행동은 우리 사회를 진정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설계하고 바꾸기로 결심했다"면서 "수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 과제들은 말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으는 공동실천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해 헌신한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지식인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사회를 설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봄'을 앞당기기 위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대,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폐기, 국가정보원 해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4대강 복원 및 탈원전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민생의 봄'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로 "재벌개혁과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강조하고, 쌀 수입 중단, 개방농정과 한미FTA 폐기, 노점단속 및 강제퇴거 중단,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또 '자주와 평화, 통일의 봄'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로 "사드 철거를 비롯한 한일 위안부 야합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그리고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미군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는 "한반도 평화의 봄이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촛불항쟁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대중조직들과 민중진보 정치세력들은 아직 민중의 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봄과 함께 민중의 봄을 위해 함께하자"고 말했다.

'민중공동행동'은 "개혁 100대 과제 중 진척되고 있지 못한 과제는 39개로 농민과 빈민, 사회적소수자 권리 보장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민중들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기 전에 민중들의 요구를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문재인 정부 취임 1년에 즈음한 민중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열리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민중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문재인 정부 취임 1년에 즈음한 민중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열리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중공동행동 가게 대표자들이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